

2019학년도 수능 대비 매화송 모의고사 1회 해설지

1등급 컷은 42~44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표본이 없어서, 정확히 알기는 힘드네요.

* 표시는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여겨지지만, 알아둘 만한 내용을, ** 표시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선지는 해설하지 않았습니다.

1. 사회계약설

본 글은 루소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 ①~④는 필자의 견해에 부합한다. '곳곳에 사슬'이란 표현은 주로 루소가 자연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원제 *Du Contrat Social*)에서 발췌.

2. 정치 참여 집단

②** 「정당법」 제17조에 의하면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③** 「정치자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3. 헌법기관

①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④ 행정각부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4. 법이념*

자료는 '배분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의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부모가 행사하도록 한 경우는 배분적 정의에 대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 2008 9월 모의평가에서 발췌 및 변형

5. 지방선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소수대표제를 적용한다. ③ 보통의 경우, 국민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교육감에 대해 7표를 행사한다. ④ 주민은 지역 조례에 대하여 제정 및 폐기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단체의 조례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6. 기본권

㉠은 참정권, ㉡은 사회권이다. ① 환경권과 보편권은 사회권에 포함된다. ② 역사가 가장 오래된 권리는 자유권이다. ③ 공무 부담권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④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⑤ 사회권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7. 법률 및 헌법의 제·개정 절차

㉠은 국민투표이다. ① 헌법 개정 절차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④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8. 상속

사례에 의하면, B, C는 200억 원, 병은 300억 원, D와 F는 각각 120억, 80억 원을 상속받는다. ㄱ.* D와 F는 A의 상속분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ㄴ.**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는 기여분제도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 부양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ㄷ. C의 나이에 관계없이 혼인한 상태라면,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ㄹ.* 원래의 상속인이 될 자가 결격되면,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

※ 대습상속의 경우, 수능 연계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의미 정도는 알아둬야 좋을 것 같습니다.

* 2017 중등임용고시에서 변형, 2004 법원 주사보 참고

9. 정치적 이념 비교

쟁점 투표에서 유권자는 선거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과 가장 유사한 입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사형제 폐지를 X축으로, 유류세 인상을 Y축으로 해서 여기에 유권자 갑, 을, 병의 입장과 후보자 A, B, C의 입장을 표기하면 각각 갑(0,-2), 을(1,2), 병(0,0), A(-1,2), B(-1,0), C(3,-1)이다. 따라서 갑(0,-2)은 B(-1,0)와 가장 가깝고, 을(1,2)은 A(-1,2)와 가장 가까우며, 병(0,0)은 B(-1,0)과 가장 가깝다.

※ 2010학년도 대수능 '정치'에서 발췌

10. 선거제도

①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

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선거 전반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③* 대통령을 제외한 보궐 및 재선거에 따라 당선된 자는 통상의 다음 선거까지 재임한다. ④ 소선거구제는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감독이 용이하지만,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⑤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전반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11. 불법행위

ㄱ.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긴급피난에 의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난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동물에 의한 피해는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배상 책임은 소유자 B가 아닌 A에게 있다. ㄹ. 손해 배상은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다.

12. 부동산

(가)는 등기부 을구이다. 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사망한다면, 임차권은 임차인의 상속권자에게 승계된다. 승계자는 일반 상속순위와 다르며, 「민법」에 의한다. ㄷ.* 임대인이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면 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8. 4.10. 선고2007다38908 판결] ㄹ. 해당 내용은 갑구에 기재된다.

13. 위법성 조각 사유

(가)는 정당방위, (나)는 정당행위이다. ① 일반적으로 법익 구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은 재판을 의미한다. ② 애완견의 폭행에 대한 방위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 볼 수 있다. ③ 쟁의활동은 서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일반 시민의 준헌행범

및 현행법 체포 행위는 법령에 의해 가능하다. ⑤ 법원은 적법한 현행법 체포로 보았다.

14. 형사 절차

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을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사는 을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법익 침해가 종료한 다음의 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구속적 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을은 피고인으로, 보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의 나이가 아닌 사실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96도1241, 선고1997.2.14. 판결]

15. 정부 형태

A국은 의원내각제, B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동거정부는 의원집정부제에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 나타날 수 있다. ② 의원내각제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은 다르다. ③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④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때, 내각제를 실시하였다.

16. 소비자의 권리와 법

②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의 입증책임은 경감되나, 전환되지 않는다. ④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

17. 근로계약

① 을이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일당은 통상근로 8시간(64,000원)에 연장근로 1시간(12,000원)으로 76,000이다. ④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근로자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일반

적인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해고자를 대리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2018학년도 대수능 발췌 및 변형

18. 국제기관

①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이다. ① UN 비맹국도 ICJ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②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④ ICJ에의 제소는 양당사국의 합의를 요한다. ⑤ ICJ의 법적 자문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19. 민사 절차와 계약

ㄱ. 계약의 성립은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에 의하며,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ㄴ. 민사 재판에서 불출석 및 무변론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긍정 내지는 자백으로 간주된다.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는 현실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ㄴ.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를 국제 사회의 가장 주용한 행위자로 본다. ㄷ. 현실주의는 이상주의에 비해 국가 간 충돌 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한다고 본다.

* 2010학년도 대수능 '정치'에서 발췌